

## 지역일자리 정책의 방향

이 규 용\*

이번 호 『노동리뷰』에 게재된 특집에서는 지역일자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방소멸위험과 지역고용의 상관관계분석을 다룬 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지방소멸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지방소멸이 주변지역의 공간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정책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 및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통영시와 군산시의 일자리 이동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주로 동종 산업 또는 관련 산업이 있는 지역으로 일자리 이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전직지원정책이 인적자본에 축적된 숙련유지정책과 궤를 같이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방소멸, 인구유출, 지역산업 및 고용위기와 같은 주제들은 최근 지역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이슈들이다. 이러한 주제들은 지역발전전략이라는 점에서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들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쉽지 않으나 이와 연관된 공통된 주제어가 지역고용 문제임을 생각하면 지역일자리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지역고용정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과 정책의 분권화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 왔다. 2018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일자리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같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일자리 사업을 기획·설계·운영하도록 하는 「지역기획형 일자리사업」의 확대 및 신설과 기존 지역일자리 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일자리 정책이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재량권이 보다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몇 가지 논점들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지역일자리 정책은 누가 실행하는가에 관계없이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럼에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소장(leeky@kli.re.kr).

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 단체 간 지역일자리 정책추진의 역할이나 협력체계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 운영의 성격상 표준화된 정책을 구현할 수 밖에 없는 중앙정부보다는 지역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광역이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광역의 경우 자칫하면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광역단위의 표준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기초지역의 정책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기초단위의 경우 인프라나 역량이라는 점에서 제약요인이 많다. 고민스러운 지점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역일자리 정책의 분권화를 논의함에 있어 정책의 기획, 실행 및 이에 따른 예산의 배분과 성과관리라는 종합적인 틀에서 중앙정부와 광역 그리고 기초지역 간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전국단위의 일자리 문제의 해법에 대한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 책무성과 지역의 정책 유연성을 조화롭게 구현해 나갈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역일자리 정책에서 다루는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이번 호 『노동리뷰』의 논문에서 보듯이,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일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높다는 것은, 일자리가 많은 인접지역으로 인구이동이 가속화되는 결과의 산물이며 이는 인접한 두 지역의 동일한 정책목표가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인접한 두 지역을 같은 권역으로 설정하여 이 문제를 바라볼 경우 인구이동이나 지방소멸, 나아가 일자리 창출 모델에 대한 접근이 달라질 수도 있다. 행정권역단위로 완결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인프라의 중복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기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밖에 없지만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은 때로는 개별 지역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좋은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소멸도 개별 소지역단위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통근권과 같은 노동시장권역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다른 해법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역일자리 정책의 포괄범위이다. 지역단위의 일자리정책이 갖는 장점은 부처의 특성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칸막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일자리 정책은 지역산업, 지역인적자본, 지리적 여건 등 지역이 갖는 특성을 종합한 지역 내생적 발전전략이라는 틀에서 접근해야 함을 요구받고 있다. 지역일자리 정책은 지역산업발전정책,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지역노동시장 통합 및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구축 및 운영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를 포괄하는 지역 고용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 및 인프라의 구축과 더불어 실현가능한 실행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KLI**